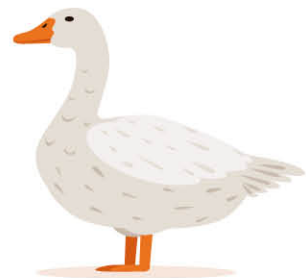


# 기약없는 사육제한 조치 가슴치며 울부짖는 오리농가들

오리사육제한 조치 4년째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오리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일한 대처로 농가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017년 겨울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정책적 개선없이 4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간 오리산업 생산액은 반토막이 난 상황으로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개선없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정책적 개선없이 올해로 4년째 '되풀이'  
사육제한이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

3년간 지출 보상금+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



## 근본대책 절실하지만 답변없는 메아리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매년 전국의 30% 이상 오리농가의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농식품부의 사육제한 정책은 오리농가와 계열업체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협회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전국 오리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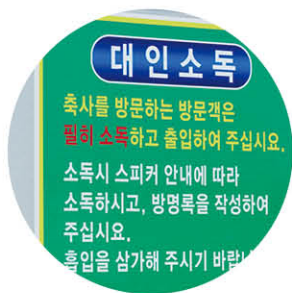
협회는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 가금농가와 철새에서 AI 발생이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당연하는 듯이 정례화되고 있는 사육 제한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협회는 농식품부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가축 사육제한 추진방안 상의 육용오리와 종란 폐기 보상단가가 매우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전년도 수준으로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안에 따르면 육용오리 보상단가의 경우 전년도 873원보다 58원 떨어진 815원, 종란 폐기 보상단가의 경우 전년도 600원보다 131원 떨어진 469원(폐기하는 종란의 50% 물량 이내)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협회는 종란의 경우 부화율을 감안해 50%가 아닌 135% 물량 보상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육제한 조치로 텅빈 오리축사







### 방역시설 개편하는 대책마련 '절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향후 50년, 100년 이상 기약없는 사육제한이 아니라 농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사육제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비교적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이 겨울철에 사육제한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지금부터라도 사육시설과 방역시설을 개편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협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오리 사육시설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오리농가 911호 중 76.3%인 695호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로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417호 중 77.5%인 323호가 비닐하우스형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오리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비율은 52.2%로 가장 높았다. 닭 사육농가가 오리대비 5배 가량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 비율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오리협회는 매년 기약없는 사육제한의 시행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오리농장의 사육시설과 방역시설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허관행 한국오리협회 차장은 “타 축종에 비해 뒤늦게 생긴 오리농가들은 그동안 보조사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연도별 AI 발생현황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15년	'16/'17년	'17/'18년
시기	'03.12.10 ~'04.3.20 (102일간)	'06.11.22 ~'07.3.6 (104일간)	'08.4.1 ~5.12 (42일간)	'10.12.29 ~'11.5.16 (139일간)	'14.1.16~7.29 (195일)  '14.9.24~'15.6.10 (260일)  '15.9.14~11.15 (62일)	'16.3.23~4.5 (13일)  '16.11.16~'17.4.4 (140일)  '17.6.2~6.19 (17일)	'17.11.17 ~'18.3.17 (121일)
발생 유형	H5N1	H5N1	H5N1	H5N1	H5N8	H5N8 H5N6	H5N6
발생 건수	19	7	98	53	38	419	22
재정 소요액	874억원	339억원	1,817억원	807억원	3,364억원	3,621억원	906억원
총 1조1,728억원							

※ 국비 소요액 : ('03/04) 874억원—('08) 1,817—('14/15) 3,364—('16/17) 3,621—('17/18) 906

## 농가사육·방역 시설개편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오리농가사업참여 여건 완화...전략적 예산투입 시급

“최근 입식제한기간 14일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의 보조사업까지 사라져 이제는 농가 스스로가 시설을 개편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오리농가 시설 개편을 위한 사업예산이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보조금이 전 축종 모두 없어진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협회의 말처럼 형평성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전 축종 중에서 가장 뒤늦게 생긴 오리농가들의 현대화사업 참여율과 보조사업 혜택을 받은 비율 등을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3년간 사육제한 조치로 지출된 보상금만 200억원에 달한다. 오리산업에 발생하는 막대 피해까지 감안하면 현재 지출되고 있는 보상금을 오리농가 시설 개편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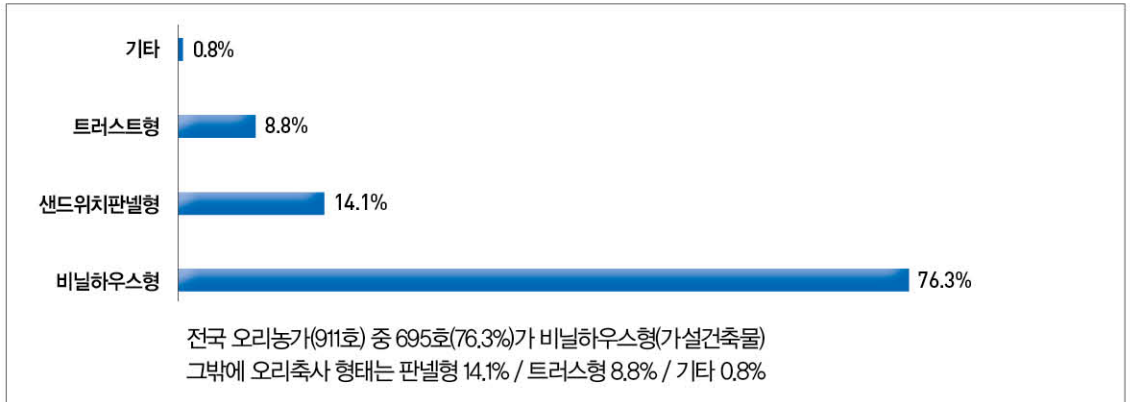
중장기적 안목으로 오리농가들의 사업참여 여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전략적 투입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 오리축사형태별 시 발생비율 : 가설건축물이 85.7%로 매우 높음

구분	2017/2018		2016/2017	
	발생 농가수	발생 비율	발생 농가수	발생 비율
가설건축물 계	12	85.7%	114	71.3%
비닐하우스	8	57.1%	63	39.4%
가설건축물형 건축물	4	28.6%	51	31.9%
판넬형	2	14.3%	36	22.5%
기타	-	-	10	6.3%
계	14	100%	160	100%

### 오리농가가설건축물 현황



\* 오리 사육시설 개편방안 연구용역 (동국대학교 '19. 6)



사육제한에 참여한 농가들도 AI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사진은 축사인근에 생 석회를 뿌려놓은 모습

### 오리농가 두 번 올리는 사육보상금에 대한 오해

항간에서는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해 사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이같은 얘기에 오리농가들은 두 번 운다.

김 회장은 “사육제한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비록 AI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오리를 정상적으로 사육하고 정당한 수익을 얻고 싶어 한다”며 “사람이 사는 집도 오래 비워두게 되면 이곳저곳 하자가 많이 생기고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축사의 경우 더욱 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어 “겨울철 4개월 동안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심정으로 텅 빈 축사를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오리농가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에도 매년 개선되지 않는 방역정책에 오리농가들이 희생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어찌 넘어간다 해도 개선없는 정부 정책에 전국 오리농가들의 사육제한 전면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오리산업과 질병방역을 위한 진짜 정책이 세워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